

The Purpose of Schooling in the Light of Plato's Theory of Republic

Kyung-hwa Ju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Objective]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many national crisis, such as disastrous incidents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is paper reveals more clearly the substance of Korean national crisis in the light of Plato's theory of republic and discusses which public education purpose to be taken as a priority for the national justice.

[Contents] The meaning of justice that Plato defines in designing a theoretical model of a good state is 'doing one's own job'. A state can be regarded as composed of a guardian group and a producer one. What is critic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just state is public education to educate guardians or producer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talent and dispositi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for the guardians' commitment to the whole community rather than seeking for their own interest, and for the guardian education it is crucial for them to acquire 'civic courage'. If we look in the Korean crisis, we finds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who can be regarded as guardians do not have 'civic courage'. In addition, there is a more serious crisis in that the producer community or the occupational state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state is collapsing.

[Conclusions]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citizen education should be taken as a primary purpose of public education.

[Keywords] Korean national crisis, Plato's republic, The purpose of public education, Civic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Justice

^{*} **Corresponding to** Kyung-hwa Jung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kjung0424@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플라톤의 국가론에 비추어 본 공교육의 목적

정경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최근 우리사회에는 참사에 가까운 안전사고, 대통령 탄핵 등 국가적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여러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본고는 플라톤의 국가론에 비추어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고 국가를 국가답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공교육의 목적을 논한다.

[연구 내용] 올바른 국가의 본을 세우는 작업을 통해 플라톤이 찾아낸 국가적 차원의 올바름은 ‘제 일을 하는 것’이다. 국가는 수호자와 생산자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이 각자의 소질과 성향에 맞게 수호자 또는 생산자가 되어 제 일을 하는 것이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다. 특히 수호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 ‘시민적 용기’를 갖춘 수호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등 공공성이 강한 일에 종사하는 이들을 수호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우리가 경험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시민적 용기’를 갖추지 못한 수호자의 책임이 크다. 이에 더하여 국가의 근간이 되는 생산자공동체 또한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결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시민교육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주제어] 국가의 위기, 플라톤의 국가, 공교육의 목적, 시민교육, 직업교육, 정의(正義)

I. 플라톤의 국가론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사건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어왔다. 세월호 사건이 가장 큰 충격을 주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고 예방이나 구조 활동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미흡함을 보이는 참사들이 이어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나 공위 공직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들의 비위사건 또한 이어졌다.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급속히 현대국가의 토대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성숙시켰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온 터라 최근 우리가 목도한 사건사고는 우리나라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만한 일들이었다.

무엇이 국가가 국가로서 잘 기능하지 못하게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밀하고도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직접적 문제 해결보다는 한 나라가 나라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국가가 올바른 국가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플라톤(Plato)의 정의(正義)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문제 극복을 위해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것인지를 알아보는 데 있어 우리는 플라톤(Plato)의 『국가(政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¹⁾ 플라톤은 참된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나라가 나라답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진 사상가 중의 한 명이다. 플라톤이 그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²⁾ 플라톤이 살던 시대의 아테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내용은 『국가(政體)』 1권과 2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대화록에서 플라톤의 철학적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인 소크라테스는 여러 대화 상대자들과 올바른 것(to dikaios, justice)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른 것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는 주장을 한다(338c). 이 주장은 개인의 특이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아테네 사

1) 해당 플라톤의 대화록의 제목은 고대 그리스어로는 ‘Politeia(πολιτεία)’이고 영어로는 ‘Republic’으로 번역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또는 ‘국가론’으로 가장 널리 번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박종현의 우리말 번역본을 인용하는 관계로 박종현의 번역본 제목을 따른다. 박종현은 ‘Politeia’의 정확한 번역은 ‘정체(政體)’라고 설명하면서 ‘국가’라는 번역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어 국가 옆에 한자어로 정체를 병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Plato, 1997: 41-42).

2) 특히 플라톤이 아테네의 정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진 계기가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라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lato, 1997: 11-40; Yonsei University Educational Philosophy Society, 1996: 45-51; Chang, 2014: 193).

회의 정의에 대한 불신 풍조가 반영된 것인데 이는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형제가 트라시마코스에게 이어 소크라테스에게 도전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 형제에 따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한 자의 삶이 올바른 자의 삶보다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로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바른 것을 법률과 약정으로서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359a). 하지만 강한 자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자로 보이는 온갖 방법을 이용하여 결국 국가 통치권을 획득하고 올바른 이를 억압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361a-366d). 이들 형제가 말하는 강한 자들의 행태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결사나 당파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중 연설과 법정 변론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설득의 교사들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설득을 함으로써, 때로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욕심을 부리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365c).

현재 대한민국이 2,500년 전 아테네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탈옥수의 외침에서 시작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풍자하듯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이들이 부와 권력의 결탁을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 게다가 정치적 결사, 언론 장악, 공권력을 동원한 대중 억압 등은 우리나라의 부정한 정권들이 자주 활용했던 방법으로, 이들은 때론 국민을 속이고 때론 국민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권을 챙겨왔다.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형제가 성토했던 부정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었고, 최근에도 국가최고지도층의 비위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즉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나라다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플라톤이 당시 가졌던 물음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참된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던 플라톤의 철학적 탐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하는 우리 사회에 긴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철학자로서 역사상 가장 높은 칭송을 받아오기도 했지만 그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곧바로 부정되기 시작한 이래 끝없이 비판받아 왔다. 특히 『국가(政體)』는 가장 많이 반박의 대상이 되었던 대화록인데, 플라톤이 묘사하는 이상 국가는 현대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3분된 계급사회, 수호자 계급의 배우자·자식 공유, 재산 사유 불허, 전쟁에서 공을 세운 수호자들에게 성관계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 자손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우생학적 재생산 방식 등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포함되어 있다. 결정적

으로는 철인왕에 의해 통치되는 전제적 정치체제를 상정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비판해왔다.³⁾ 다른 한편, 설령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자체가 완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작은 규모의 정체에 대한 이론이므로 현대국가와 같이 거대한 정체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나라는 도시국가(polis)였고, 당시 아테네는 다른 도시국가에 비해 예외적으로 컸는데, 인구 10-20만 정도의 도시였다고 한다. 플라톤이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한 현실적 문제들을 다룬 말년 대화록 『법률』에서 구상했던 나라의 인구도 2만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Plato, 1997, 41-42). 이와 같이 플라톤이 상상했던 국가는 현대국가에 비해 극히 작은 공동체이므로 이를 현대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대 그리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사고와 상상력은 그 후 2,500여 년이라는 세월동안의 경험이 축적된 우리에게서 여러 면에서 비논리적, 비인간적,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현실성에 대해서는 『국가(政體)』에서도 대화 상대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다(471c-e). 이에 대해 플라톤 스스로도 현실성이 부족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가 하는 작업이 훌륭한 나라의 본(paradeigma)을 만드는 것일 뿐 현실성을 따지는 것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하며 그의 작업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임을 주장한다(472a-473e). 이 주장은 그대로 현대인들이 제기하는 비현실성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의 현재적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제시한 국가통치의 방법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보다는 플라톤의 논의에서 국가의 본, 원형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국가의 구성 원리를 검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II. 국가의 기원과 올바른 국가

1. 국가의 기원

플라톤은 국가의 기원(arche)을 밝히는 것을 국가의 본을 세우는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플라톤에 따르면 나라의 기원은 인간의 필요(chreia)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각자가 그 모든 필요를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한

3) 플라톤 정치사상 비판가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학자, 칼 포퍼(Karl Popper)는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I』에서 플라톤의 전제주의 체제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Popper, 1945). 우리나라에서도 플라톤의 『국가(政體)』에 대한 비판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연구로는 Kim(2017)과 Lee(2015)의 연구가 있다.

거주지에 모여 사는 협력자들의 생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기원인 것이다. 즉 서로 기대어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비자족적 존재 조건이 그대로 국가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369b). 인간이 비자족적 존재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업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소질과 성향에 맞는 일을 전담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결과물을 공동체 전체와 나누는 방식이다.⁴⁾ 플라톤은 우리가 어떻게 분업을 통해 국가를 이루고 또 확장하는가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나라는 ‘최소한도의 나라(최소 필요국: *he anankaiotate polis*)’로 네다섯 명의 사람이 분업을 통해 의식주를 함께 해결하는 생활공동체이다. 각각의 구성원이 농사짓기, 집짓기, 직물 짜기 등, 생존에 필요한 일 중 한 가지 종류를 전담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함으로써 혼자서 모든 일을 할 때 보다는 수월하게 살아가는 형태이다(369c-370a).

두 번째 나라는 보다 다양한 직종들이 추가되어 확장된 나라이다. 생산도구를 만드는 장인, 농사나 운반에 필요한 가축을 돌보는 목부,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품을 수입하는 무역상 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 나라에는 시장과 화폐를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경제제도가 생기고 임금노동자도 직종으로 추가된다(370d-371e). 첫 번째 나라에서의 삶은 최소한도의 필요를 충족하며 어렵사리 사는 수준이라면 두 번째 나라에서는 분업의 효과가 커지면서 구성원들이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들은 뚝자리를 깔고 생활하고,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 먹으며, 과일과 콩 등의 후식을 즐기고, 여가생활을 누린다. 성생활을 즐기지만 자식을 많이 낳지 않아 자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 나라는 구성원 모두 건강하게 평화로운 삶을 오래 누리기에 ‘참된 나라(*alethine polis*)’ 또는 ‘건강한 나라(*hygies polis*)’라고 명명된다(371a-d).

마지막으로 ‘건강한 나라’에서 규모가 더 확장되면 ‘호사스러운 나라(*tryphosa polis*)’, ‘염증 상태의 나라(*phlegmainousa polis*)’가 된다. 이 나라에서는 각종 가구, 귀금속, 예술품, 다양한 기호음식 등이 생산, 소비되면서 관련된 수많은 직업이 또 추가된다.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게 되어 오로지 식용육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돼지농장 관리인, 육류 전문 요리사도 필요하게 된다.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기도 하다(372d-373d). 특히 이 나라에는 수호자라는 특수한 직업이 필요하게 된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된 나라는 더 넓은 영토 또한 필요하다. 결국 이웃나라와 영토분쟁이 불가피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에서는 전쟁 수행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373d-374e).

세 가지 형태로 점점 확대되는 국가가 ‘최소한도의 나라’, ‘건강한 나라’, ‘염증 상태의 나라’로 불리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는 두 번째 나라이

4) 『국가(政體)』에서 계속적으로 플라톤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일’인데, 기능을 의미하는 희랍어 *ergon*과 업무의 의미가 강한 *epitedeuma*가 혼용되고 있다. 박종현은 주로 ‘일’로 통일해서 번역하고 있다(Plato, 1997).

다. 두 번째 나라는 수호자라는 특수 직종 혹은 특수 계급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생산자로만 구성된 나라로 플라톤은 이 나라에 대해 ‘이미 완전하리만큼 성장한 나라’라고 말한다(371e). 더 다른 직종이 필요하지 않은 완성된 형태의 나라라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사치와 탐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여 전체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잘 유지된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지 구태여 가릴 필요가 없는 ‘참된 나라’, ‘건강한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명화된 사회가 그렇듯이 인간 사회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게 된다. 규모가 확장되고 분업이 고도화되면서 생산력이 높아진 세 번째 나라에서는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호품이 만들어지고, 기호품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구성원들이 더 많은 자원과 영토를 필요로 하게 한다. 이렇게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플라톤은 ‘염증의 상태’라고 말하며 문제시하는데, 커진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서 국가 내외로 갈등 요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비한 직종인 수호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나라에서는 올바름과 올바르지 못함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372e). 따라서 세 번째 규모와 형태에서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나라가 된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형태와 규모의 나라보다 올바르지 않은 나라가 되기 쉽다. 그리하여 그대로 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나라에서는 찾을 필요가 없던 올바른 국가의 본, 모범적인 국가의 모습을 세 번째 국가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2. 올바른 국가와 수호자의 덕

세 번째 형태의 국가에서 올바른 나라의 본을 보이기 위해 플라톤이 자세히 다루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나라를 특징짓는 직종인 수호자이다. 수호자가 나라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기에 어느 직종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두 번째 나라인 ‘참된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로만 구성된 나라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었던 올바르지 못함이 수호자 집단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호자 집단 대표 직종은 군인이다. 세 번째 국가가 영토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직종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수호자집단은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국가 전체와 관련된 일을 일상적으로 전담하는 국가통솔 집단이다. 따라서 수호자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직종으로 넓혀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국가의 규모가 확장되고 고도로 세분화되면서 국가안위와 관련된 다양한 공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현대에도 국가 간 영토분쟁이 있지만 현재 대다수의 국경이 안정되어 전쟁이라는 물리적 충돌이 많지는 않다. 대신

국가 내외의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요인이 많아지면서 국제적, 국내적 문제를 조정하는데 수 많은 공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군인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공직자들과 그 밖에 공공성이 높은 일을 수행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플라톤이 지칭하는 수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政體)』에서는 국가 구성원이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로 3분되고 통치자는 수호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하지만 통치자는 수호자와 확실히 구별되는 직종이기보다는 수호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통치자는 수호자 안에서 분화된 직종으로 크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다. 통치자 이외의 수호자가 통치자의 보조자로서 명명되는 것(414b)을 보더라도 이들이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치자와 보조자를 나눌 것 없이 모든 수호자에게 필요한 성향은 기개가 높은 것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376c), 통치자나 보조자 모두에게 같은 선발, 교육, 생활방식이 적용되는 것을 보아도, 이들은 모두 같은 자질, 능력, 생활조건을 필요로 하는 같은 직종의 사람들인 것이다. 따라서 세 번째 국가에서 직종은 크게 국가의 근간이 되는 생산자에 국가공동체의 안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수호자가 더해진 2분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政體)』는 많은 부분이 수호자에 대한 논의에 할애되어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정의가 수호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수호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강한 자가 잘못된 성향을 가지면 그 강함을 이용하여 다른 공동체 구성원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치게 된다. 플라톤은 수호자를 계속 개에 비유한다. 수호자는 양떼를 지키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개들이 무절제나 굶주림 또는 기타 나쁜 버릇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지키는 커녕 이리처럼 양들을 해치려 들도록 훈련되면 안 된다(416a). 양치기 개가 이리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면 한 명의 생산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지 않을 때의 손실보다 한 명의 수호자가 본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플라톤의 대화 상대자인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강한 자의 행태를 묘사했듯이 강한 자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능함을 뜻하기 보다는 주로 악함에 적극적으로 임함을 뜻한다. 그들은 자신의 강함을 이용하여 얻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가 올바른 국가가 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수호자가 같은 공동체 구성원을 수호하는 본분에 충실한가인 것이다.

수호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는 방안으로 플라톤이 제시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앞서 밝혔듯이 분업, 즉 국가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소질과 성향에 맞는 일을 전담하는 것이 국가 성립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국가는 타고난 자질 또는 성향(physis)이 수호자라는 직종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그 타고난 성향이 수호자에게 필요한 성품(ethos)이 되도록 계발하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게 해야 한다. 수호자에 적합한 성향은 용맹함과 영리함이다. 플라톤은 수호자를 다시 혈통 좋은 강아지에 비유한다. 수호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근한 사람에게는 온순하고 적들에게는 사나워야 하는데, 개와 비교하면 개가 친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개라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가진 용맹함에 더하여 영리함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개의 용맹함은 인간의 걱정(기개, thymos)에 그리고 온순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philosophos)에 대응되는 것으로 플라톤은 보고 있다(375a-376c). 용맹함과 온순함을 모두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수호자로 키우는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의 교육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가(mousike) 교육과 체육(gymnastike) 교육으로 구성된다. 두 교육 모두 걱정[기개]적인 면과 지혜를 사랑하는 면이 적절하게 개발되어, 용기 있으면서도 온순한 수호자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다(412a).

플라톤은 또한 수호자가 될 이들에게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동체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치자, 보조자[수호자], 생산자들은 모두 대지에서 태어난 형제로 각각 금, 은, 동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414d-415a). 이 이야기는 플라톤이 계급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해석된다. 사실 플라톤은 세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권익이 차등 분배되는 귀속적 계급사회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맞게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의존하는 구별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⁵⁾ 신화에 따르면 금, 은, 동을 각각 포함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기 부모와 똑같이 금, 은, 동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의 자손에서 은이, 은의 자손에서 금이 나오는 등 부모와 다른 성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런 현상은 금, 은, 동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기는 하나 모두가 동족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415b-c). 이에 부모와 상관없이 타고난 능력과 성향에 맞는 역할을 맡아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신화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통해 플라톤이 수호자들 마음속에 새기려 했던 것은 각자 소질과 성향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 구성원이 모두 형제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공동체성이다.

플라톤은 수호자들이 같은 국가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발과 교육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논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제한하는 장치까지 제시한다. 수호자가 같은 국가 구성원을 해치는 계기가 주로 사익 추구에 있으므로 사익을 추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호자들에 대해서는 생산자들과 달리 재산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가족관계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배우자와 자식을 공유하는 등 철저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도록 법제화한다(416d-417b).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플라톤은 수호자들을 철저히 경계한다. 한 나라의 올바르지 않음[정의롭지 못함]이 이들에게서 비롯되기에 수호자를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 온순하고 용맹한 성향을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통해 수호자에 적합한 성품을 기르고, 국가 구성원들을 모두 형제로 여기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사익을 추

5) ‘구별공동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e(1999)를 참고.

구할 이유가 없는 조건 속에 살게 할 방법까지 고안하고 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이리가 아닌 개로서 양을 지키는 일을 수행할 준비가 이루어진 후에야 수호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이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성품 함양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 잘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지적 훈련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시작된다. 플라톤은 일련의 지적 훈련을 통해 수호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 즉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episteme)에 이른 자인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호자 교육의 끝에서는 지적인 면에서 수준차가 생겨 통치자와 보조자로 나뉘지만, 수호자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게 되는 덕이 있으니 시민적 용기(시민적·평민적 덕, politike·demotike arete)이다(430b, 500d). 이 덕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판단]’의 지속적 보전으로 정의된다(430b). 소신 또는 판단(doxa)은 최고 수준의 앎의 방식인 인식(episteme)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이 효력을 미치는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수호자는 올바름을 견지할 수 있는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판단]을 가지게 되고 이를 어떤 사태 속에서도 고수하게 된다.⁶⁾ 짐승이나 노예는 시민적 용기를 가질 수 없는데, 이들은 주인의 지시대로 따를 뿐이며, 혹시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우연일 뿐 덕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에 그런 판단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⁷⁾ 결과적으로 수호자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는 것은 시민적 용기이다. 시민적 용기를 가지고 있는 수호자들은 어떠한 사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발휘하여 공동체를 위해 일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다. 수호자가 시민적 용기를 갖추고 있는가, 즉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일에 임하는가가 한 나라를 올바른 국가로서 서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III. 올바른 나라의 본: ‘시민교육 국가’와 ‘직업인 국가’

플라톤이 올바른 나라의 본을 세우는 작업 중에 기본 원리로서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제 일을 하는 것(to ta hautou prattein)’이다(433b). 이 원리는 그대로 올바름의 정의가 된다.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개인의 삶 그리고 국가의 공동체적 삶이 올바르게 서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임이 강조되고 있다. ‘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올바름의 축약된 정의를 2장의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올바른 국가의 본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

6) 시민적 용기가 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올바름을 견지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im(2012)의 연구를 참조.

7) Plato(1997) 279쪽 각주 22번.

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수호자와 생산자라는 두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올바른 국가는 수호자라는 특수 집단이 제 일을 하도록 길러내는 ‘시민교육 국가’인 동시에 생산자들이 각자 제 일을 하는 ‘직업인 국가’이다.

앞서 논했듯이 여러 직종 중에서도 올바른, 즉 ‘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잘 실현되어야 할 직종은 수호자이다. 수호자들이 제 일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더 큰 공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선발과 교육,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에게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고수하는 성품인 시민적 용기[시민적 덕]가 자라나게 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 ‘시민적 용기’를 갖춘 공직자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시민교육 국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생산자가 ‘제 일을 하는 것’ 또한 국가적 차원의 정의를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수호자의 정의로운 성품과 책임의식이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것이지만 생산자 또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집단이므로 생산자 집단과 관련된 정의 또한 올바른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플라톤이 인간의 필요를 분업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을 국가의 기원으로 보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생산직을 맡아 일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참된 나라’에서 보았듯이 개인들이 각자의 일에 전념하는 나라에서는 그 분업의 효과가 커져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구성원들이 물질적으로는 소박하면서도 풍요로운 삶,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행복한 개인들로 구성된 국가가 바로 참된 국가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신만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장인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일을 놓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이런 태도가 당연한 듯 말한다(405c-e). 우리도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는 연기자나 쓰러지는 날까지 교단에 서고 싶다는 교육자와 같이 자신의 일을 죽는 날까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직업은 우리에게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 의미인 것이다.

인간은 생명체로 태어나 자연의 생태적 순환의 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첫 번째 국가에서 보았듯이 의식주로 대표되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먹고, 자고,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생리적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생명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세계를 구성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직업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것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⁸⁾ 직업인들이 건강이 위중한 순간에도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자연적 생명보다 사회적 생명 유

지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국가가 최초에는 비자족적인 인간들이 협력하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국가는 또한 직업인들이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런 면에서 올바른 국가는 기본적으로 ‘생산공동체’이자 동시에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아를 실현해가는 ‘직업인 국가’이기도 하다.

IV. 시민적 덕을 갖추지 못한 수호자들과 흔들리는 직업인 국가

지금까지 플라톤이 제시하는 올바른 국가의 본을 분석하여 올바른 국가는 ‘시민교육 국가’와 ‘직업인 국가’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 올바른 국가는 제 일을 하는 수호자를 길러내는 ‘시민교육 국가’이다. 즉, 시민적 용기를 갖추어 국가 전체를 위해 헌신할 수호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시행되는 국가이다. 다른 한편 올바른 국가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춘 생산자들로 구성된 ‘직업인 국가’이다. 국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고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는 생산자공동체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듯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수호자 집단이다. 그런 면에서 현대국가에서 수호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들이 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현대사회의 수호자는 공직자에 더하여 공공성이 강한 일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호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해보겠다.⁹⁾ 먼저 공직자 집단에 속한 대표 직종을 나열하면

8)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직업이 없는 학생, 은퇴한 노인 같은 경우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직업은 보통 생계를 위해 하는 생산 활동으로 한정하여 개념화되지만 주되게 전념하는 사회활동으로 보는 듀이(Dewey)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보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도 해도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듀이(Dewey)의 직업 개념에 대해서는 Dewey(1916) 23장 참조.

9) 현대국가에서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직자에 더하여 공공성이 높은 일을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주장에 대해, 플라톤이 구상하는 이상적 국가 체제는 전제정이고 우리의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라는 면에서 플라톤의 수호자를 민주정에서의 공직자에 대응시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의 민주정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수호자와 공직자의 대응은 무리가 없다고 답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체제는 플라톤이 제시한 통치자 일인과 보조자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전제군주정과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민주정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민주정을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부분 전문 관료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면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특수집단인 수호자에 의해 국가가 관리되는 형태와 배치되지 않는다. 민주정과 전제정의 양립이 가능한 것은 현행 민주주의가 시민의 투표로 정치적 대리인을 선출하는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정치는 모든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순수한 민주주의 체제도, 대중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통치자에, 각 부처 장관 등 행정부 관료들과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은 보조자에 직접 대응된다. 플라톤이 말하는 통치자의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는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인 국회의원, 법관은 근본적으로 통치자에 해당된다. 한편 현대 사회의 거대한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공직 외에도 공공성이 높은 다른 많은 직업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으로는 정치권력 형성과 견제에 관여하는 정당인과 언론인도 수호자에 해당된다. 넓게 보면 학자도 국정 운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수호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직종 대부분이 플라톤이 말하는 수호자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볼 수 있다.¹⁰⁾

지금까지 지목한 수호자들이 각자 제 일을 해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 수호자들은 각자 맡은 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공동체 정신으로 무장하여 개인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헌신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지키는 시민적 용기가 있어야 수호자의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직종을 나열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백만에 이를 것이고, 이들이 모두 제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호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호자 중에서도 통치자에 해당되는 국가최고지도자들이 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각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전직 대통령들과 대법관이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 수호나 사익 추구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통치자에 해

정치적 참여를 차단하고 일인이 통치하는 순수한 전제주의 체제도 아니기에 정반대의 정치체제의 교묘한 동거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정과 전제정이 양립하는 정치체제의 존재 가능성은 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톤이 민주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이 제시한 전제정에서 수호자는 반특권적 존재라는 점, 그리고 플라톤이 비판했던 민주정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대중이 주도하는 중우정치의 형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플라톤이 제시했던 정치체제인 전제정은 비민주적이기는 하나 반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Lee(1989) 참조.

10) 신좌섭(The Kyunghyang Shinmun, 2017.7.11)은 ‘적폐의 핵심엔 전문직이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공무원, 군인, 교육자, 의료직 종사자, 법률가, 기업의 전문경영인을 공익 추구를 사명으로 하는 직종으로 보고 있어 본고에서 공공성이 높은 직종으로 보는 범위보다 더 넓게 그 범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자와 의료직 종사자의 경우 인간을 교육하거나 돌봄으로써 그 일의 공공성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인류를 위한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수호자 직종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문경영인의 사명을 공익 추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진다. 전문경영인은 많은 인원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고, 경영인들의 기업 운영방식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 공공성을 가지는 직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생산이고 전문경영인 또한 생산을 위한 업무가 주를 이룬다. 전문경영인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적 특성은 부차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경영인은 수호자가 아닌 생산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당되는 또 다른 집단인 국회도 과연 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의심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분히 제 몫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겠지만 국회가 제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통치자와 관련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올바르게 옳은 국가이다. 일부는 특정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정의롭지 않은 나라, 올바르게 옳은 나라로 특징짓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모든 국가최고지도자들이 비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의한 일들을 단순히 특정 정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국가최고지도자 아래에는 수많은 보조자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들의 무능이나 부정의 가능성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 또는 지시가 필요할 때 지시를 내리지 않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수호자인 보조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갖는 국정운영의 책임의 무게는 최고지도자 못지않다. 이들이 제 일을 한다면, 다시 말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시민적 용기를 갖추고 있다면 부당한 지시에는 불복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시가 없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 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종종 국가적 차원의 위기감을 느끼는 때는 단지 최고지도자 뿐 아니라 관료들도 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물론 관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료주의가 갖는 기본적인 문제점, 즉 세분화된 분업과 위계화된 조직구조로 인한 무사안일성, 경직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의 관료조직이 단순히 관료제의 폐해 때문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관료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망각하여 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

먼저, 통치자의 역할을 일부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 법관이 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짐작하게 하는 기사가 눈에 띈다. 법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이가 법관이다. 하지만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가 법관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거나 정권의 눈치를 본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Pressian, 2017. 3. 29). 법관들조차 승진에 목을 매 법 논리까지 포기하며 판결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오직 상급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리보전에 또는 승진에 해가 없도록 일하는 소시민이었던 것이다.

국가공동체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관료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 2016년 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이 민중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일이 있었다(The Kyunghyang Shinmun, 2016. 7. 8). 국민을 1% 대 99%로 나누고 99%를 개·돼지로 취급하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던 일이다. 그와 같은 국가관을 가진 이가

교육부 고위직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관료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고위직 공무원은 자신을 1%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국민 전체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을 특권 계층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오직 개인적 성공만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주로 공직자들이 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들었지만 공직자 이외에도 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사는 여러 직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언론인이 있다. 언론인은 권력 감시라는 매우 중요한 공적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시민적 용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언론인들이 철저한 취재 없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보도 자료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기계적인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기자정신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자들이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국가적 피해를 입히는 등, 각종 전문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시민적 용기를 발휘하여 권위에 대항하다가 좌천되거나 면직되는 관료들이 있고,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여러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기게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다. 하지만 시민적 용기를 발휘한 이들보다는 순종하거나 침묵하는 편을 택하는 수호가 더 많았기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했고, 최고지도자들의 비위도 막지 못했던 것이다.

앞서 수호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나열했지만 하나의 직종이 추가되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위치는 아니지만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바로 시민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이 주어져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요구받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본업과 시민이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된다. 사실 민주주의가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이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이 시민으로서 바로 서서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예상과는 달리 대중이 일어나 불의로부터 국가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보여주었던 성숙한 정치적 실천도 대중들이 시민적 용기를 갖추고 있는 수호자였음을 드러내는 사건들이다.

현대의 민주정에서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중이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곤 한다. 주로 선거 국면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집회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항상 비밀상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전적으로 수호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대중도 정치적 주체라는 점에서 시민

적 용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가공동체를 위한 일을 전업으로 삼는 공직자와 전문가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시민적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관료, 법조인, 언론인 등 수호자의 직업의식 실종에 대해 논의했지만 다른 직업군에서도 직업의식 실종이 흔히 목격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직업인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소임의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점검하지 않아 어린이가 버스에 갇힌 채 오랜 시간 방치되고, 의사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각자의 소임이 갖는 중요성, 각자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공동체에,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바른 나라는 수호자들이 전체 국익에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안위를 잘 돌보는 나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각자의 소질과 성향에 맞는 한 가지의 일을 맡아 훌륭하게 해내는 나라이다. 즉 훌륭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는 각자의 직업 활동을 통해 함께 국가 전체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자 공동체’이자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직업인 국가’이다. 점점 더 기계와 같이, 노예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마비가 되고 개인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와 같이 사회 구성원이 치밀하고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사회, 비자족성이 극도로 높은 사회에서는 한명, 한명의 직업인들이 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한 명이 제 일을 하지 않은 결과가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생산자도 수호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자 각자가 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V. 공교육 목적: 시민교육과 진로교육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회 전체에 직업의식의 결여가 만연되어 있을 때 국가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많은 이들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계속 강조했듯이 국가공동체의 안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가지는 수호자 집단의 직업의식 실종, 시민적 용기의 부족은 가장 긴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와 같이 공교육 제도가 비교적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에서 수호자들이 시민의 덕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공교육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교육은 개인의 권익 증진보다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안위와 번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¹¹⁾ 따라서 국정 운영을 직접 책임지거나 깊게 관여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공교육이 국가에 복무할 시민들을 길러내

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구성원의 일부는 수호자 직종, 즉 전문 관료나 공공성이 높은 전문가가 되어 전적으로 국가를 위한 일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생산자인 일반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이 직업인인 동시에 정치적 주체인 시민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점에서 모든 학생이 공동체의식과 시민적 용기를 가진 시민이 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장차 다른 직업을 가지겠지만 또한 시민으로서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현대 공교육의 시민교육은 플라톤의 수호자 교육과 그 목적이 다르지 않다.

다른 한편 시민교육을 공교육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시민교육이 공교육의 목적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실패를 공교육 전체의 실패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공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 국가의 발전, 인류의 번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목표로 구성되지만 앞서 보았듯이 플라톤의 국가관에 비추어 본다면 건전한 시민과 각자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직업인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이념을 밝힌 제2조와 직업교육에 대해 기술한 21조가 해당 부분이다.¹²⁾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과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이 계발되도록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를 공교육의 핵심 목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특징화되고 이에 대해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을 오직 대학입시 성공을 위한 수험생으로 획일화시키고 과열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시민 양성과 직업인 양성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그리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다. 입시교육에서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시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른 이들을 같은 성취목표를 가진 경쟁자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식 형성에 해가 된다. 직업인 양

11) 공교육이 개인적 권익 증진과 무관한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말이다. 본고는 국가를 중심에 두고 교육에 대해 논하는 것이어서 자유주의적 관점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공교육을 바라보기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이 본고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자세한 논의가 어려우므로 공교육에서 개인적 권익은 국가 공동체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최대한 증진되어야 하며 해가 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오해를 피하려 한다.

12)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관련해서도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행해지는 것은 문제이다. 입시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때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이 무시되기 쉽다. 적성을 탐색하더라도 대학입시를 위한 적성일 가능성이 높다. 즉, 어떤 전공을 택하는 것이, 어떤 입시전형을 택하는 것이 대학입학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적성의 개념이 제한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은 입시라는 틀 안에 담을 수 있는 규모와 성격의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탐색은 대학 진학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결국 입시가 최우선이 된 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에서 대학입시는 무조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학입시는 제일의 목표가 아니라 진로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위치지어진다.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을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단계가 입시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공교육의 핵심 목적이 망각된 속에서 입시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기회도 진로탐색을 통해 직업인의 삶을 대비할 기회도 박탈된 채 입시공부 기계로 획일화된다.

개성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환경, 학생들을 획일화시키는 교육방식이 오랫동안 그대로 용인된 것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교육에 대한 자유주의적 권리 의식이 그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국가는 개인들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공정한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교육은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같은 교육을 받은 개인들은 같은 능력이 계발되었음을 뜻하고, 따라서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같은 기회가 주어질 근거가 된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이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야 하는 것이고, 획일화는 어쩌면 교육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저마다 다른 소질과 성향을 타고나므로 교육을 통해 모든 개인들에게서 똑같은 능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부정의하다. 두 번째 나라인 참된 나라에서 보았듯이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는 개인들은 다른 이들과 경쟁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를 맺게 된다. 모든 개인이 개인적 성공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을 합하여 공동의 성공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참된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저마다 다른 능력을 계발하는 것은 경쟁 없이 모든 개인을 성공적인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모든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나라가 가장 정의로운 나라이다. 개인들이 자신만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공교육을 개인의 행복 추구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보다는 모두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는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이해 속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는 교육,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찾는 교육, 자신이 맡은 일의 사회적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하는 직업인으로 성장

하도록 돕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롭지 않은 상황에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을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 공교육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한다.

References

- Chang, C. W. (2014).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Prelude(prooimion) in Plato's Nomoi.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4), 193-217.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이홍우 옮김 (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Kim, K. M. (2017). A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in Plato's Republic. *Educational Idea*, 31(1), 1-24.
- Kim, N. D. (2012). Is the Citizen in the Just City Unjust?: An Examination on the Position of B. Williams. *Human Beings,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9, 93-110.
- Kim, H. (2007). A Critical Evalu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ystem. *Journal of Korean Politics*, 16(1), 141-167.
- Kim, H. S. (2009).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Epitedeuma in Plato's Republic.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1), 1-17.
- Lee, M. G. (2015). The Point of View on the Justice of Socrates in Plato's Republic and Its Limits.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75, 279-303.
- Lee, S. I. (1999). Platons Staatsphilosophie Zum Verhaeltnis des Einzelnen und des Staates in der Politeia. *Philosophical Studies*, 45, 165-191.
- Lee, J. H. (1989). Plato and Democracy.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3, 127-145.
- Pressian (2017. 3. 29). Chief Justice Responds to Deadly Judicial Survey Results. Retrieved 2019.04.01. fro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458>
- Popper, K.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ume I: The Spell of Plato*. 이한구 옮김 (2006). 열린 사회와 그 적들 I. 서울: 민음사.
- Platon. *Politeia*. 박종현 옮김 (1997). 국가(政體). 경기: 서광사.
- The Kyunghyang Shinmun (2017. 7. 12). [Empathy] At the Core of Deep-rooted Corruption Are Professionals. page 31.
- The Kyunghyang Shinmun (2016. 7. 8).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aid, "The People Are Dogs and Pigs. ... The Class System Must Be Solidified.". page 2.

연세대학교 교육철학회 (1996).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 고대에서 근대 초기까지**, 서울: 교육과 학사. (Translated in English) Yonsei University Educational Philosophy Society (1996). *Great Educational Thinkers I - From Ancient Times to Early Modern Times*, Seoul: Kyoyookbook.